

(참고자료-참조10)

## 은수미 시장 3차례 면담 무산... 성 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뒷북 대 책'도 문제

일일 3만명 규모, 실제 6천명, 코로나이후 3천명대  
공공성 근거로 지난해부터 면담 등 도움 요청  
돌아오는 것 없고 적자 눈덩이, 휴업 결정  
성남시 대책 발표, "근본적 해결방안 필요"

B민간업체 측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성남시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묶여 부대편의시설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극히 제한적이다. 민간이 운영하는데도 일정 정도 공공성이 부여된 형태다.

B업체 관계자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용역을 했고, 지난해부터 담당 부서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고 비서실 등을 통해 은수미 시장 면담을 3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면담 요청은 거부됐고 담당 부서는 다른 부서에 떠넘겨 돌아오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B업체측이 장기 휴업을 꺼내자 성남시는 이날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휴업 대차방안과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1일 은수미 시장과 터미널 측 임원진과의 면담을 갖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2년여 동안 사실상 뒷짐 지고 있다가 휴업으로 시민 민원·불편이 예상되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여기에다 자원 방안 중 '터미널형 경가버스 라운지조성'은 이미 확장된 경기도 사업이며 '시설개선' 등은 매 청사업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B업체 관계자는 "마치 우리가 돈을 지원받기 위해 휴업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휴업한다고 했겠느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답이 없다"며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장 면담 부분은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